

2020년 9월 주요 시사

I. 주요시사

II. 시사 파헤치기

I. 주요시사

■ 박원순 고소인은 피해 호소인?--- MBC 입사시험, 2차 가해 논란

MBC 신입 취재기자 입사시험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고소인에 대한 호칭을 묻는 문제가 나와 시비가 일고 있다.

13 일 언론사 시험 준비생 커뮤니티와 SNS 등에 따르면 이날 치러진 MBC 신입 취재기자 입사시험의 논술시험에서 '박 전 서울시장 성추행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를 피해자라고 칭해야 하는가, 피해 호소인이라고 칭해야 하는가(제 3 의 호칭이 있다면 논리적 근거와 함께 제시해도 무방함)'라는 문제가 출제됐다. 이를 두고 고소인에 대한 '2 차 가해'라는 지적이 터져 나왔다.

앞서 지난 7 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박 전 시장 고소인을 피해 호소인이라고 칭해 논란이 됐다. '2 차 가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고소인의 호칭을 피해자로 통일하기로 했다. 이후 상당수의 언론에서도 박 전 시장 고소인에 대해 피해자로 칭하고 있다.

MBC 한 관계자는 미디어 비평지 '미디어스'를 통해 "이미 공론화된 문제"라며 "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자기 입장을 서술하는지 궁금했으며 평소 언어 사용에 대해 얼마나 고민하는지 묻고자 출제했다"고 해명했다.

야권은 공개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 차 가해이자 응시자를 정치적으로 줄 세워 정권의 호위무사를 채용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조차 피해 호소인이란 잘못된 표현을 인정하고 피해자로 용어를 변경했음에도 MBC 가 재차 용어 논란을 꺼낸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 스스로 공정한 언론의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정한 언론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출제자와 이를 승인한 관계자를 징계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 의대생 국시거부 잠정 유보---재응시 허용시 공정성 시비 불가피

국민 동의할까...'국시 구제말라' 청와대 국민청원 55 만명 돌파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에 반대해 의사 국가고시 거부에 나섰던 의대생들이 그간의 강경 입장을 한풀 꺾으면서 이들의 시험 재응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전국 40 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 학년 국시 응시자 대표들은 13 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단체행동을 잠정 유보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후 행동 방침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 후 발표하겠다"며 국시 재응시에는 일단 선을 그었다.

비록 이들이 국시에 응시하겠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설혹 이들이 시험을 다시 치겠다고 나서도 정부가 이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반대 여론이 높아 국민적 동의를 얻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의료계 원로들까지 국민에게 사과하며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구제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의료계 원로들은 지난 11 일 호소문을 내어 "(의대생들이) 유급과 국가고시 거부를 선택한 것은 선배들과 스승들의 잘못"이라며 "학생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동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국가 주관 시험에서 수험생들이 응시를 철회한 후 접수 기간이 지나 재응시를 허용한 전례가 없는데, 의사 국시만 허용할 경우 공정성, 형평성 시비가 불가피한 탓이다.

전국 의대 본과 4 학년 학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해 나섰던 단체행동을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

전국 40 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 학년 국시 응시자 대표들은 13 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게시물이 올라왔고, 이날 오후 2 시 57 분 기준 55 만 403 명이 동의했다.

다만 정치적 해결책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의정 합의에 도장을 찍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응시 구제책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정치적 해법의 운을 뚫지만, 여당 주요 인사들이 의대생들의 구제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이 또한 쉽지 않아 보인다.

■ 질병관리청 출범

질병관리본부가 오는 12 일부터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감염병 대응 총괄 기관으로서 위상이 강화된다. 또 보건복지부는 보건 분야를 전담하는 차관을 신설해 복지·보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면서 44 명을 보강한다.

행정안전부는 8 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개정안은 개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을 시행일인 12 일에 맞춰 시행된다.

질병관리청은 복지부에서 독립해 차관급 외청으로 감염병 정책 수립·집행에 독자적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유행을 계기로 2004 년 1 월 국립보건원 조직이 지금의 질병관리본부로 확대 개편된 이후 16 년 만에 이뤄지는 조직개편이다.

초대 청장에는 정은경 현 질병관리본부장이 내정됐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라는 초유의 위기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을 맡아 방역 최일선 대응을 지휘해왔다.

질병관리청은 조직은 청장과 차장을 포함한 5 국·3 관·41 과와 소속기관으로 구성된다.

정원은 본청 438 명과 소속기관 1 천 38 명 등 모두 1 천 476 명으로 질병관리본부 정원 907 명에서 569 명이 늘어난다.

질병관리청과 복지부 간 기능 이관으로 재배치하는 인원을 제외하고 새로 보강하는 순수 증원 인력은 384 명으로 기존 정원의 42%에 해당한다.

정부가 지난 6 월 발표한 당초 개편안은 질병관리청의 연구기능을 복지부로 이관하며 정원을 대폭 축소해 '무늬만 승격'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으나, 이번 제·개정안은 질병관리청 정원을 크게 늘렸다.

본청에는 감염병 유입·발생 동향을 24 시간 감시하는 종합상황실과 감염병 정보를 분석해 예측하는 위기대응분석관을 신설해 위기 상황 감시 기능을 강화했다.

또 감염병관리센터는 감염병 제도를 총괄하는 감염병정책국으로, 긴급상황센터는 감염병위기대응국으로 각각 재편했다.

아울러 백신 수급·안전관리와 일상적 감염병 예방기능을 맡는 의료예방안전국, 원인불명 질병 발생 시 대응을 위한 건강위해대응관을 신설해 감염병 발생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예방까지 전 주기에 걸친 대응망을 구축했다.

■ 디지털 교도소

한국인 강력범죄자·성범죄자·아동학대범 등의 사진, 이름, 나이, 거주지, 휴대전화 번호 등의 신상 정보를 수집해 임의로 공개하는 익명 웹사이트이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2020 년 5 월 인스타그램에서 텔레그램 n 번방·박사방 등 성범죄 피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던 '@nbunbang'을 운영하다가 계정 정지를 당한 후 6 월부터 이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운영자에 따르면 신상정보 기준은 경찰의 신상공개 여부와 관련없이 '피해자의 고통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크게 성범죄자(디지털-소아성애-지인능욕), 아동학대 가해자, 살인자 등 3 개 부류로 범죄자 목록을 구성하고 있다. 여기에 성범죄자 뿐만 아니라 이들에 관대한 처벌을 내린 판사들의 신상도 공개하고 있다. 또 신상을 공개한 피의자들의 재판 일정도 명시하고 있으며, '수배 게시판'에서는 다른 사건 피의자들의 사진을 메일이나 SNS 메시지 등으로 제보를 받고 있다.

한편, 이러한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강력 범죄자에 대한 적극적인 신상 공개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개인이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즉, 디지털교도소에서 이뤄지는 신상정보 공개는 불법행위이며 신상공개 대상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어서 법치 국가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아울러 재판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피의자들에 대해 사적인 기준으로 심판을 하는 것은 무고한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범죄와 전혀 관련 없는 가족이나 친구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2 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높다.

실제로 2020 년 9 월 3 일 디지털 교도소에 개인정보 가 노출된 한 대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다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사이트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 공모주 약발 다했나... 카카오게임즈 연일 약세

카카오게임즈가 연일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카카오게임즈는 지난 10 일 기업공개(IPO) 당시 공모주에 관심이 쏠리면서 청약증거금만 58 조 5000 억원이 몰리며 IPO 사상 최대 증거금을 기록한 바 있다. 카카오게임즈가 지난 10 일 상장 후 '따상상'에 성공했으나 연일 하락하며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날도 약세를 보이며 주가가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 개 가격으로 형성 후 상한가) 가격 아래로 떨어졌다.

21 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게임즈는 전일 대비 3900 원(6.15%) 내린 5 만 9500 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까지 6 거래일 연속 하락해 따상 가격인 6 만 2400 원 밑으로 떨어졌다.

많은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카카오게임즈는 지난 10 일 코스닥 시장에 화려하게 입성했다. 투자자들의 관심을 입증하듯 상장 첫날 공모가의 2 배인 4 만 8000 원에 시초가를 형성한 뒤 곧바로 상한가로 직행, 6 만 2400 원에 거래를 마쳤다.

카카오게임즈는 상장 다음날에도 상한가를 찍고 8 만 1100 원에 마감했다. 이른바 '따상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 배 가격으로 형성 후 이를 연속 상한가)에 성공한 것이다.

하지만 카카오게임즈의 상한가 행진은 오래가지 못했다. 지난 14 일 9%대 하락 마감한 후 주가가 연일 약세를 보이는 것이다. 이날까지 6 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이날 결국 6 만원 밑으로 떨어졌다.

주가가 연일 하락하면서 카카오게임즈에 물린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기준 카카오게임즈의 개인 순매수량은 462 만 2800 주로, 순매수액은 3721 억 5000 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평균매수가는 7 만 5243 원으로 현재가(5 만 9500 원)와 비교해 1 만 5743 원(-20.92%)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이후로도 약세 흐름을 이어갈 경우 손실액은 더 커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공모주들이 상장 직후 일시적으로 '오버슈팅'(일시적 폭등)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후 본래 밸류에이션(가치평가)을 찾아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창권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게임기업 기업공개(IPO) 초기는 신작 기대감과 결합한 오버 슈팅 구간"이라며 "넷마블과 펠어비스의 경우에도 상장 초기 주가수익비율(PER)이 급등했는데, 게임기업들이 IPO 를 위해 준비한 신작의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II. 시사 파헤치기

■ 징벌적 손해 배상 도입 논란

○ 징벌적 손해 배상

징벌적 손해 배상이란 기업이 과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입증된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토록 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기업이 추후에 비슷한 일을 또 다시 저지르지 않게 하는 제도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제도를 '응징과 억제'를 위해 부과되는 사적 벌금'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미국과 다르게 한국은 현재까지는 실제 손해액의 배상만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표 사례 》

맥도날드 커피사건. 1992 년 맥도날드 매장에서 커피를 구매한 70 대 여성 스텔라는 차 안에서 커피에 설탕을 넣으려다가 커피를 앞질러 다리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 이 여성은 맥도날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는 맥도날드에게 손해배상금 16 만 달러를 포함하여 징벌적 손해배상금 48 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 한국의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 도입 배경

한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촉발한 사건은 2015 년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 사건이다.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디젤 게이트'에 대응하는 폭스바겐의 대처는 미국과 한국에서 확연하게 달랐는데, 미국에서는 곧바로 리콜조치와 함께 소비자가 원할 경우 차량 환불과 한 사람당 최대 1,100 만원을 배상한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시간만 끌다가 '소프트 웨어 업데이트'와 100 만원 짜리 쿠폰을 제공하는 것에 그쳤다.

반면 현대자동차는 2011 년 미국 몬태나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한 건과 관련해 2014 년 현지 법원에서 2 억 4000 만 달러(약 2470 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현대차는 2013 년 버지니아주에서도 접촉 사고 때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머리를 다친 소비자에게 1400 만 달러(약 159 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처럼 한국 소비자는 글로벌 기업에 '호구' 취급을 받고 한국 기업은 해외에서 거액의 배상금을 무는 일이 속출하자 국내에서도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최근 법무부에서는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문턱을 대폭 낮추고 기업의 방어권 행사를 이전보다 어렵게 하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영미권과 비슷하게 실제 손해액의 3~5 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보편화 될 것이다.

○ 논란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은 언론에 적용하면서 논란은 더 뜨거워졌다. 한국은 명예훼손죄(형법 307 조)에 대해 형사처벌을 진행하고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추가하는 건 과잉된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동시에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자본이나 공인에 대한 언론의 견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더욱 확대되었다.

○ 찬성 측 논리

1. 소비자 구제 길

집단 소송제는 분야 제한 없이 피해자가 50 명 이상이면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하는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피해를 본 모두가 함께 구제받는 방식이다. 기업으로 인한 피해는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부터 가슴기 살균제 참사, BMW 차량 주행 중 화재 사건 등 끊임없이 발생했었는데 피해자들의 소비자 구제 길이 열렸다는 전망이 나온다.

2.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

집단 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은 오히려 기업이 준법 경영을 하게 도와 구제에도 나서면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한국은 그간 기업에 사전 규제는 강했지만 사후 처벌은 약했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기업이 운영을 잘 하게 되면 불필요한 사전 규제를 푸는 기초가 될 수 있다.

○ 반대 측 논리

1. 기업 활동을 옥죄는 법안

2. '소송 남발'의 부작용 및 기업 이미지 신뢰도 저하

소송 당사자의 비용이 적고 변호사는 높은 보수 기대가 가능하면서 기업 상대 소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미국에서는 2002 년 맥도날드가 광고 내용보다 실제 열량이 높아 비만 위험을 관리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소비자 집단 소송을 당했다. 스타벅스 역시 2016 년 '얼음이 너무 많고 커피 양은 적다'는 이유로 500 만 달러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라는 집단 소송을 겪었다. 궁극적으로는 두 기업 모두 승소했지만 기업 이미지 타격은 피할 수 없었다.

3. 모호한 법안 기준

정부는 '손해액의 5 배 이내'라고 한정했지만 민사는 기준이 없으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사안별로 2 배, 5 배 등 액수 산정 논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

4. (언론 입장)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사회적 강자에 의해 다수의 약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시정하는데 적합한 제도인데, 권력의 감시가 본연의 역할인 언론을 상대로 제조물 책임을 묻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 동시에 미국에서도 언론을 상대로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언론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언론의 감시 기능과 국민의 알 권리는 위축시키려는 과잉규제이자 위험적 소지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 방송수신료 인상 “국민의 방송으로 태어나도록”vs “신중히 생각할 문제”

○ 이슈배경

"수신료를 현실화해야 공정방송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공정방송 역할을 제대로 해야 수신료 현실화를 추진할 수 있다"

수년간 지속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쟁에 KBS가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 "수신료 현실화가 먼저"라고 주장했다. KBS가 1일 주최한 시청자포럼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KBS가 공정방송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신료 현실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찬성 측 논리

<한국일보>는 최 위원장이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서 한 발언을 소개했다. 그는 "수신료가 책정된 것이 벌써 25년 가까이 됐으며, 그때 2,500원이었는데 지금도 2500원"이라며 "KBS 수신료는 그동안 물가나 공공요금 인상 등을 고려할 때 2,500원선으로 그대로 둔다는 것은 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KBS를 정말 공정한 독립된 방송으로, 말 그대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방송으로 만들려면 그에 상응하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면서 "현실적 문제를 타결해 주면서 사랑받는 국민의 방송으로 태어나도록 우리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BS의 드라마 '겨울연가'와 '뮤직뱅크'같은 K-POP 콘텐츠가 한류 전파의 첨병이었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대중문화계는 단숨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가 있었으며, 그 발전을 견인해온 한 축이 바로 공영방송인 KBS라는 데에도 이의가 없습니다.

우리 협회에 회원으로 속해있는 많은 음악저작자들의 창작물은 방송을 통해 대중에게 전달 유포되어 사랑을 받아야만 발전할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또한 이러한 저작물들이 방송사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받음으로서 창작인들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고, 지속적인 음악문화 발전도 가능한 것입니다.

금번 KBS의 수신료인상은 단순한 수수료 인상이 아닌 '현실화'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맞는 기준이 세워져야 현실에 맞는 국민의 알권리도 충족된다고 생각합니다.한 국가의 방송문화의 수준은 곧 그 나라의 문화수준입니다. KBS라는 공영방송이 한층 높아진 대한민국의 국격에 걸맞은 고품격 콘텐츠를 생산해 우리나라 문화 창달에 더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반대 측 논리

수신료에 대한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다. 최은경 전남과학대 교수가 이날 소개한 '공영방송 수신료 관련 시청자 견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성인 1000명 중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6%에 불과했다(6월 미디어오늘 조사). '폐지해야 한다'가 46%, '적정하다'가 26%, '인하해야 한다'가 14%로, 인상에 부정적 의견(86%)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최 교수는 "시청자들이 공영방송에 대한 만족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인하·폐지 의견이 60%에 달하는데 이는 단순 부정의견을 넘어 공영방송이 더는 필요 없다거나 수신료에 적극 반대하는 입장으로 보인다. 이것이 공영방송 정상화 이후 KBS가 받은 성적표"라고 꼬집었다.

앞서 KBS 시청자포럼에서 이준웅 서울대 교수는 "방송의 공정성은 공영방송의 여러 문제 중 가장 심각하다. 공정성 시비가 있는 한 공적 재원을 더 확보한다든지 새로운 혁신 전략을 내세워도 공적인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영방송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시청각매체 이용자 입장에서는 전보다 확장된 선택을 누리고 있다. (해외 고품질 콘텐츠를 접한) 시청자들은 공영방송의 사정에 대해 동정해줄 게 별로 없다"고도 덧붙였다. 공영방송이 '공공성의 최후 보루'를 자임하고 있지만 시청자가 지금처럼 그 존재 이유를 체감하지 못하고, 높아진 눈높이도 따라잡지 못하는 한 지상파 살리기는 기득권 지키기, 혹은 정치적 우군 살리기일 뿐이라는 얘기다.